

정부, 서비스산업 지원 확대… “반도체와 달려갈 성장주자”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동반성장 모색
화장품 분야 AI 기반 상품개발 지원
이형일 부총리, 국회 관심·협조 요청

정부가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분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 중 화장품 부문의 경우, 펀드 조성을 통해 AI(인공지능)를 접목한 상품 개발 지원에 나선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TF(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와 함께 달려나갈,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라고 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하다.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K-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이 도약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시

상과 가장 가깝고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민생 산업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

도 본격화하겠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고도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공항공청 5대 관광권 범부처 협업방안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 ▲제2회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세부 추진방안 ▲11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 중 인공지능·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책이 향후 주목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AI를 K-뷰티에 접목하기 위해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중견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에 펀드가 함께 투자하는 방식으로 AI 피부진단과 맞춤형 화장품 등 새로운 뷰티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 기술력 있는 화장품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쉽도록 대출금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최대 95%로 높인다. 보증료율도 0.2%포인트(p) 낮춘다.

AI가 피부 상태를 분석하고 자동화기가 개인에게 맞는 화장품을 만드는 서비스도 육성한다. 외국인이 평소 쓰던 앱으로 결제할 수 있는 국내 매장은 올해 4만 개에서 내년 8만 개로 늘린다.

우선 250억 원 규모의 ‘오픈이노베이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국내의 대·중견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펀드도 해당 투자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40억 원까지 함께 투자한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기업에는 올해 1200억 원 규모의 우대보

증을 지원한다. 우대보증이란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쉽도록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대출금 비율을 높이고, 기업이 내는 보증료를 낮춰주는 제도다. 또 중소 화장품 브랜드에, 초기제품 생산 필요 자금을 연간 3억 원 이내·5년 만기의 융자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AI 피부진단과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충한다. 현재 제공 중인 18개국 1만7000여 명의 피부 특성 정보를 내년부터 AI가 학습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고, 조사대상 국가를 누적 19개국으로 늘린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방한 외국인 등 2000명의 메이크업 전후 사진과 설문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체험·결제 기반도 확대한다. 알리페이 등 22개국 71개 앱과 연동되는 표준 QR코드 설치 매장을 올해 4만 개소에서 내년 8만 개소로 늘려 국내에서 익숙한 앱으로 간편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韓, CPTPP 발효 후 수출품 47.7% 경쟁력 하락”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산업연구원 CPTPP 전후 경쟁력 분석
“비회원국 지속시 시장접근 조건 격차”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한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비회원국 지위가 지속될 경우 역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국제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CPTPP 가입을 미룬 사이 역내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 약 절반에 달하는 품목의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한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발효 전(2012~2018년)과 발효 후(2021~2024년)의 대(對)CPTPP 역내 대칭환시비교우위지수(RS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11개 회원국들은 경쟁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RSCA(Relative Symmetric Co

mparative Advantage)는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이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대표적인 무역 지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발효 전후 한국 수출품 5185개 중 2474개(47.7%)의 경쟁력 지표가 하락했다. 15개 전 업종에 걸쳐 한국의 역내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특히 조선 업종은 한국의 하락 폭과 CPTPP 회원국의 상승 폭 격차가 15개 업종 중 가장 컸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전기전자·자동차·석유화학 등에 걸쳐 고르게 경쟁력 하락이 관측됐다. 대세계 수출액 상위 품목 중 과라지일렌, 전기자동차, 승용차 등의 역내 RSCA 하락 폭이 컸으며, 특히 자동차 부문(배기량별 승용차 및 전기차 등 3개 품목)의 역내 경쟁력 위축이 뚜렷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품목 등의 부진 원인 중 하나로 ‘관세 및 시장접근 조건의 격

차’를 꼽았다. 한국은 CPTPP 11개국 중 유일하게 멕시코와 특혜무역협정이 없어 최혜국(MFN) 관세를 부담해 온 반면, 회원국들은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석 기간 이후인 2026년 1월부터 멕시코가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일부 품목에 5~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불리함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CPTPP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경우 CPTPP 시장에서의 입지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향후 관세 등 시장접근 조건 격차의 개선에 대한 압력 확대가 예상된다”며 “특히 하락 품목을 대상으로 CPTPP 시장 내 경쟁력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적 관점에서는 멕시코와의 통상 환경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위, 1.4조 규모 밀가루 부산물 담합 적발

6개 사업자, 최대 2100억 과징금 전망

국내 주요 밀가루 제조사들이 8년 넘게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규제당국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남 등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 사업자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매월 밀가루 부산물(소맥파·등외분 등)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생산물로, 주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시

로 가축용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 기간 담합에 영향받은 관련 매출액만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0.5~15.0%로, 매출액에 단순 적용시 최대 2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외 장기금리 상승세 지속시 금리·주가 변동성 확대

» 1면 ‘美 국채금리 상승…’서 계속

8월 예금은행의 가계·기업 대출금리는 모두 상승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38%로 전월보다 0.16%p,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6%로 0.18%p 올랐다.

한은은 당시 기업대출 금리 상승에 단기사장금리 상승 등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9월 이후 해외 금리 움직임에 앞선 8월 대출 취급분을 집계한 것이다.

◆ 국채·AI 기업채 발행 확대

한은은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의 배경으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각국의 재정건전성 우려, 주요국 중앙

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를 꼽았다. 미국에서는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주요 기업의 회사채 발행 확대도 상승 요인으로 가세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13일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FSR) 발표 관련 공식 설명자료에서 물가 압력과 재정 불균형, 국채와 민간 부문의 대규모 채권 발행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 위험을 제시했다. 성장과 기업 실적의 금융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기존 취약성이 충격을 증폭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차입을 활용한 채권투자도 위험 요인이다. IMF가 앞서 공개한 GFSR 분석 제2장에 따르면 미국 국채 잔액 중 헤지펀드의 보유비중은 2022년 약 4%에서 2025년

9%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펀드는 빌린 돈으로 국채를 사고 선물을 매도해 가격 차이에서 수익을 얻는다. 추가 담보 요구나 자금조달 충격으로 투자 규모를 급하게 줄이면 자산 매도와 유동성 감소를 통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지난 12일 국감 업무현황에서 해외 장기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금융여건이 긴축되고 금리·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압력을 받고 이에 따라 가계·기업의 조달금리 상승폭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정부, 주거·교통·이주비 지원 대책 마련

» 1면 ‘공무원 1만명 세종…’서 계속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월세 매물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올 하반기 새로 발령을 받아 세종으로 내려온 공무원 중에는 입주할 집을 찾지 못해 한두 달 동안 단기 임대주택에 머무르다 이사한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어진동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월세는 올랐는데 들어갈 집은 없고, 단기 임대는 한 달에 150만원씩 하나씩 공무원들이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신규 입주를 통해 임대차 매물을 늘릴 여력도 당장은 제한적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추정치에 따르면 세종에서 내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0가구다. 2028년 상반기 예정 물량도 1122가구

수준이다.

가족 동반 여부와 기존 주택 유지 여부에 따라서도 주택 수요 규모와 유형이 달라질 전망이다.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자녀가 어리면 가족이 함께 정착하는 편이지만, 서울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공무원 혼자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세종에 집을 사도 대부분 서울에서 살던 집을 팔지 않고 유지한다”고도 귀띔했다.

한편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해 주거·교통·이주비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채리 기자 cr56@